

## 과학기술 軍 육성과 국민의 선택



李 裕 秀

국방대학원장, 육군중장

**현대** 군사력의 강약은 양보다 질에 의해 좌우된다. 현대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음은 물론, 동시에 군대의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를 이룸으로써 그 파괴력은 가공할만한 수준이며 사거리연장 및 정확성면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 B-17 폭격기가 4,500회 출격하여 9,000개의 폭탄을 소모하던 것을, 현대전에서는 F-117기 한 대가 단 1회 출격으로 폭탄 한 개를 투하해도 동일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Gulf전에서 그 위력이 증명된 토마호크(tomahawk) 미사일의 경우, 미사일 자체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목표물에 명중하는 장면을 세계인들은 안방에서 TV 생중계를 통하여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외에도 Gulf전에서는 F-117 Stealth 폭격기를 비롯하여, 아파치 공격용 헬기, SCUD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M1A1 전차, M60 전차, E-3 조기경보기 등의

최첨단 무기가 총동원되었다.

전쟁지휘체계면에서도 현지 지휘는 물론 위성을 통한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하여 워싱턴의 펜타곤에서 원격 지휘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이룸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다.

장차전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 군은 현대전에 적합한 군구조의 개편과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과학기술군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우선 군 구조의 형태를 병력위주의 군에서 기술집약형군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군구조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확보를 위한 노력, 충분한 시간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뒤따라야 한다.

병력위주의 군으로부터 기술집약형 군으로 이전되면 병력수는 감소되어 병력유지비는 감소될 수 있으나, 반면 첨단장비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국방예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첨단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투자의 증액이 요구되고,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제반여건조성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을 매년 일정수준으로 증액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냉전종식시대에 국방비를 증액요구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군의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과 일본을 들 수 있는데, 'The Military Balance 95~96'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1년 국방예산이 '95년도에 4조 7,236억엔(\$ 538억)으로 한국군의 '95년도 국방비 11조 230억원(\$ 143억)의 약 3.8배로서 세계 제2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되고 있다.

일본이 2차대전 패전이후 제정된 평화헌법 제 9조에 의하면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제분쟁해결의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육해공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불인정』한다는 방위정책을 견지하는 전수방어 개념의 『자위대』라는 명칭하에 군대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군사력 면에서 세계 몇째(대략 6~7위)안가는 강력한 군사대국의 잠

재역량을 보유한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 군사비가 이처럼 세계 제2위가 된 데에는 군사력의 성격이 우선 병력구조가 간부위주로(병 : 30%, 간부 : 70%)되어 직업군인으로 구성됨으로써 자연히 유지비 면에서 지출이 많고, 둘째로는 모든 군사장비와 시설 등이 현대화되고 첨단화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한 전력으로 구성됨에 따른 유지비와 지속적인 방위력 개선사업에 의한 투자비 증가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의 육상·공상·항공군의 병력수가 23만 7천명으로 한국군의 3분의 1 수준으로 국방비와 관련지어볼때 군사력의 질적인 면에서 한국군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은 바로 일본군이 과학기술군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군도 21세기 통일시대를 전망할 때 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이 과학기술군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다음 3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정자전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군은 현대전에 적합한 군구조의 개편과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과학기술군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군구조의 형태를 병력위주의 군에서 기술집약형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확보를 위한 노력, 충분한 시간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뒤따라야 한다 (사진은 E-3D AWACS 기)



시키기 위한 월등한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일식의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방식에서도 현대화된 과학기술군의 유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체제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의 경우에도 군사력의 우위유지여부는 통일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우리는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이다.

Gulf전에서는 F-117 Stealth 폭격기를 비롯하여, 아파치 공격용 헬기, SCUD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M1A1 전차, M60 전차, E3 조기경보기 등의 최첨단 무기가 중동원되었다

첫째는 남북한 군사력 균형유지 내지 우월성 유지면에서이다. 현재 한국군은 한반도 방어용 전략면에서 한미연합억제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대남도발을 억제하고 남한도발시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증원전력과 함께 한·미연합전력으로 적을 격멸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을 배제하는' 美·北간의 평화협정체결문제나 남북대화의 기피, 북핵문제 타결에 있어서 대남정책의 원류는 한국군에 대한 북한의 과소평가에 기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연합전력을 제외한 순수한 한국군 전력만으로도 북한군을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전력구조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는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한 첩경으로서의 방위력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여 올 경우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을 꺾을

질적으로 낙후된 동독군은 사실상 해체되다시피 하였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서독군을 중심으로 연방군을 1995년말까지 창설완료하였고, 1996년부터 통합훈련에 돌입함으로써 군 통합의 목표는 대략 80% 정도 달성되었다는 것이 자체 평가이다.

우리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이룩하려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군사력 통합』이란 명제 속에도 한국의 군사력 우위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세번째는 통일후 한국군의 모습이다. 통일이 이루어진 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의 균형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통일한국군의 모습은 분명히 과학기술군이 되어야 한다.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고,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뻗으려는 길목에 서있는 한반도는 21세기가 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라 보고 있는 석학들의 예언대로라면 그 중심이 동북아가 될 것

이고, 동북아의 핵은 곧 한반도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통일한국의 역할은 자못 기대할 만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21세기에 통일을 이루는 과정과 통일 후에 있어서 방위동맹관계는 다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의 21세기의 한·미동맹관계변화연구에 의하면 남북한의 통일이후 동북아지역에 어느 나라도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한·미동맹관계는 지역안보동맹 또는 정치적 동맹으로 발전되어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역내 주둔 미국의 규모와 형태는 동북아 전지역을 통괄하게 될 것이므로 경량화 내지 기동화된 군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한·미동맹관

계는 동·서독통일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남북통일의 촉진제 역할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최근 국방부는 과학기술군 육성의 첫단계로 방위산업체 경쟁력제고와 무기체계 국산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아래 미래 지향적인 과학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한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이는 참으로 시기적절한 결정이며 21세기를 대비한 방위력개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이를 위한 적정국방비 확보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바,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논리 전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1세기 통일 후에 통일한국이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자적 역할을 담당할 강력한 과학기술군을 확보유지해야 함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남은 과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57]

